

보도시점 2026. 10.14.(수) 11:00 배포 2026. 10. 14.(수) 08:00

IMF, 우리나라 부채 전망 대폭 하향

- IMF, '26년 일반정부부채 비율 46.1% 전망... 4월보다 8.3%p 하향
- '31년 일반정부부채 전망도 '26.4월 IMF 전망 대비 11.8%p 하향
- OECD 등 국제기구, 피치·무디스 등 신용평가사의 긍정 평가 이어지는 중
- 적극재정 → 성장 → 세입확충 → 지속가능재정의 '재정-성장의 선순환' 흐름 반영

국제통화기금(이하 IMF)은 10월 14일 발간한 Fiscal Monitor '26.10월호에서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 비율을 '26년 46.1%로 전망하였습니다. 이는 G7 평균(123.6%)의 37%, 선진국 평균(107.6%)의 43% 수준입니다. 또한 증가폭도 선진국 평균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.

* '26년 기준 IMF 통계표 수록 선진국 38개국 중 25위(부채비율 높은순)

IMF Fiscal Monitor('26.10) Methodological and Statistical Appendix -
Advanced Economies(38개국): General Government Gross Debt, 2017-31 中 일부 발췌

(GDP%, %p)	'26년(A)	'27년	'28년	'29년	'30년	'31년(B)	증가폭(B-A)
Average	107.6	108.4	109.9	111.4	113.0	114.6	+7.0
EuroArea	88.1	88.8	89.2	89.7	90.2	90.7	+2.6
G7	123.6	124.7	126.9	129.0	131.2	133.4	+9.8
G20 Advanced	118.2	119.2	121.2	123.2	125.3	127.3	+9.1
Korea	46.1	47.6	48.3	49.5	50.5	51.3	+5.2

이는 지난 4월 전망('26년 54.4%)보다 8.3%p 낮아진 수준입니다. 또한 IMF는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이 전망기간(~'31년) 동안 40%대 중반~50%대 초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보았습니다.

'26.4월호, '26.10월호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교

(GDP%, %p)		'25년	'26년	'27년	'28년	'29년	'30년	'31년
일반정부 부채	'26.4월(A)	52.3	54.4	56.6	58.5	60.1	61.7	63.1
	'26.10월(B)	52.4	46.1	47.6	48.3	49.5	50.5	51.3
	차이(B-A)	+0.1	△8.3	△9.0	△10.2	△10.6	△11.2	△11.8

이러한 하향 전망은 적극재정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제성장이 세입 기반을 확충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‘재정-성장의 선순환’이 중기 재정전망 개선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IMF 측 설명에 따르면 이번 일반정부부채 하향 전망은 높은 GDP 성장, ‘30년까지의 세입 여건 개선 가능성 등에 기인합니다.

이번 IMF의 전망뿐만 아니라 OECD, 피치(Fitch)·무디스(Moody's) 등 주요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, 해외언론도 최근 우리나라의 재정상황과 적극적 재정운용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

< 최근 재정 관련 국제기구·신용평가사·해외 언론 주요 코멘트 >

- ▶ (피치) 한국 재정성과가 예상보다 크게 개선되고 국가채무 경로도 안정적, 미래대응 기금이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수입 변동성 완화에 기여 가능('26.9월)
- ▶ (무디스) 한국 정부의 '27년 예산안은 지속가능재정을 추구하는 동시에 초과 세수를 미래 성장에 투입, 지속가능재정과 성장과의 균형 추구('26.9월)
- ▶ (이코노미스트) 한국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은 대만의 현금지급 사례와 달리 생산성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('26.9월)
- ▶ (OECD) 통화 완화와 확장적 재정정책이 민간소비를 진작('26.7월)
- ▶ (IMF) 한국의 부채가 지속 가능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부채 위기의 위험 또한 낮다고 평가, 부채와 관련하여 한국이 처한 상황은 전 세계의 다른 많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양호한 편('26.5월)

앞으로도 정부는 과감한 투자로 잠재성장을 반등을 뒷받침하고,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해 미래투자가 성장과 세입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는 ‘재정과 성장의 선순환’을 뒷받침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	기획예산처 지속가능재정과	책임자	과 장	오현경 (044-214-1830)
		담당자	사무관	전찬익 (jky820@korea.kr)